



## 연합뉴스 경영진 퇴진요구 본격화

### 구성원들 “사내민주화 파괴 경영진, 자리보전 용납 못해” 노조, 릴레이 시위 등 퇴진 운동 돌입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노조)가 박노황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구성원들 사이에서 고압적인 경영행태와 인사전횡으로 사내 민주화와 공정정보를 파괴한 경영진이 자리를 보전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뚜렷해지고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긴급 설문조사 결과(☞3면)와 여러 경로로 들려온 조합원들의 목소리 등으로 노조 집행부는 경영진에 퇴진을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뜻을 확인했다.

거창하고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뚜렷한 목표로 앞만 보고 간다는 일념으로 지난 5일 오전 박 사장 출근길에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퇴진운동을 시작했다.

첫 피켓에는 먼저 전 정권의 ‘애국코드’에 맞추느라 사내 구성원들의 굴욕감은 안중에도 없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국기계양식을 하는 경영진의 모습을 담고 “애국은 이제 집에 가서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 노조원 75%, 퇴진 요구’라는 설문조사 결과와 지난해 말 ‘낙제점’을 받았던 경영진 중간평가 결과도 담았다.

인사발령으로 사령장 수령 등을 위해 평소보다 많은 사원이 회사로 출근한 이날 사장 퇴진 요구 피켓을 접한 많은 사원들이 공감을 표하며 사무실로 향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출근하는 박 사장을 향해 “연합뉴스를 그만 망치고 퇴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박 사장은 웃음을 지운 채 이 지부장과 피켓

을 한동안 들여다보고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2015년 3월 첫 출근길에 편집총국장제 사수와 공정정보를 위한 피케팅을 진행하는 당시 집행부를 향해 “근무시간에 일어난 안 하고 뭐하고 있어”라고 고성을 질렀던 모습은 이번에는 온데간데 없었다.

박 사장은 릴레이 시위 이틀째인 7일부터는 시위자들을 피하려는 듯 평소와 달리 출근 경로를 틀어 이틀 연속 1층 로비가 아닌 지하를 통해 사무실로 올라갔다.

노조는 경영진 퇴진운동과 함께 지난 2년여 동안 벌어진 불공정 보도, 불공정 인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 작업에도 돌입한다.

연합뉴스의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현 경영진이 취임한 이후 벌어진 사내의 반민주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드높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적폐도 많으나 숨은 병폐도 많을 것으로 보고 사내 구성원들로부터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주영 위원장은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뜻은 이미 박노황 사장과 경영진 의 퇴진으로 모아졌다”며 “우리는 이들의 퇴진을 시작으로 정치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연합뉴스를 만드는 ‘공영언론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막내들이 열어젖힌 퇴진요구 포문 “연합뉴스 바로세우자” 성명 릴레이

박노황 사장이 집권 3년차에 접어들어서도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를 향한 구성원들의 갈망을 무시하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이는 가운데 사장 퇴진 요구의 포문을 짚은 기자들이 앞장 서서 열었다.

박 사장의 고압적 태도와 불통 행보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내부의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비정상적 정상화’를 향한 염원은 성명 발표로 표출됐고 그 포문

을 막내 기수가 열어젖혔다.

입사 3년차인 35기 10명은 5월 23일 ‘국가기간통신사 막내 기자로서 반성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사회 일선에 배치된 35기 막내 기수들은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느낀 좌절감을 절절한 언어로 토해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토해낸 뜨거운 분노가 “데스킹을 거치면서 차갑게 식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3면에 계속 ☞

###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위원장과 사무처장만 열어볼 수 있는 이메일(nojojebo@gmail.com)을 이용해 제보자 공개에 대한 걱정 없이 제보할 수 있다.

노조 홈페이지의 ‘위원장에게 메일’ 코너를 이용하면 익명으로 조합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메일 주소는 @ 문자만 들어가면 된다.

# 연합뉴스 정상화 위한 노사협의회 파행

## 노조, 비정상 상황 바로잡고자 긴급 개최 요구 경영진, 회의장 안에서 '적반하장' 밖에선 '아전인수'

“언론사는 국기 달면 안 됩니까? 그래서 국기를 내리자는 거예요, 지금?”

지난달 17일 연합뉴스 정상화라는 긴급 현안을 다루고자 노조가 요구한 임시 노사협의회가 열린 12층 대회의실.

이날 회의는 노조가 지난 2년여간 벌어진 일들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사과와 개선을 요구하면 경영진은 ‘그래서 지금 다 얹자는 거냐’는 식으로 동문서답하는, 말 그대로 파행이었다.

정권 코드에 바짝 부합해 사원들에게 큰 상처를 안긴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국기게양식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노조를 향해 “지금 국기를 내리자는 거냐? 국기가 부끄럽다는 거냐?”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목소리 높여 7차례에 걸쳐 했다.

노조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작국장 임면동의제 부활을 요구했을 때도 경영진은 갑자기 “지금 단체협약을 깨

자는 거냐?”고 했다. 경영진이 취임 직후 노사 합의로 편집총국장제를 명시한 단체협약을 무참히 깨고 나서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던 일을 환기하면, 그야말로 앞뒤 없는 발언이었다.

협의없이 단 며칠 만에 생업의 터전을 옮겨버리는 보복성 인사 발령, 합리적 기준과 근거가 없는 승호누락 등 경영진이 저지른 인사전횡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회사의 편의’가 있는데 일일이 물어보고 인사를 하겠느냐며 회사 구성원의 존재가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감추지도 않았다.

노조를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화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경영진의 인식 역시 여과없이 드러났다.

협상에서 벌어지는 의견차를 두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진행도 못하게 하는 게 노조 아니냐”, “위원장 생각이 모두의 생각이라고 일반화하지 마라, 과격하다”고 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의심하는 말을 손가락질

과 함께 늘어놓는 고압적 태도를 이어갔다.

결국 노조 집행부는 그동안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경영진이 ‘실무적 논의’를 하자는 것은 자리를 보전하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조합원들에게 협상을 계속할 의미가 있을지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경영진은 사내포털 공지게시판에 ‘회사의 입장’을 게시해 협의회 논의 안건에 대해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으며 협의회 중에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전향적인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뿐 아니라 이를 실국 소속원에 적극적으로 하달하도록 독려해 사내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급기야 사장은 한밤중 ‘호소문’을 발표해 사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를 읽어보도록 재촉하면서 노조의 설문조사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다급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 ‘편집권 독립이 언제부터 심대한 인사권 침해?’

제작국장 임면동의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언론의 존재가치를 위해 필수적인 편집권 독립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장치로 국내 많은 언론사가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합뉴스가 오랫동안 지켜온 것이다.

지난 1998년 연합뉴스 노사 공동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가 당시 제작 5국장 가운데 3국장에 대한 임면동의제 시행에 합의했고 이를 1999년 단협에 명문화했다.

당시 단협 제22조에는 “사장이 제작국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는 노조는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를 실시해 임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기자직 사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했다.

현재의 단협 제 15조가 ‘임면동의’가 아닌 ‘임명협의’만 규정하며 “재적 과반수 투표에 미달하거나 반대 투표수가 유효투표수의 2/3 미만이면 신임으

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을 보면 20년만에 제도가 진보하기는커녕 얼마나 퇴보한 것인지 뚜렷이 알 수 있다.

현 경영진이 노사 합의로 마련해 단협으로 보장한 편집총국장제를 일거에 무력화하고 오직 힘의 논리로 단협 개정을 밀어붙인 데 따른 것이다.

경영진은 노사협의회에서 류현성 편집국장 직무대행 임명 절차에 대한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반대’만 하며 단협에 명시된 협의를 무산시켰다는 주장도 했다.

노조는 그동안 끊임없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편집국장 찬반투표를 하자고 요구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업무포털에서 투표하자는 사측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며 연내 투표를 마무리하자고까지 제안했다. 그런데도 투개표관리위원회 운영 기준에 대한 노조안에 계속 반대 의사를 내며 연내 투표를 무산시킨 것은 경영진이었다. 당시 사측은 업무포

털에서 투표하기 위한 보안장치 마련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2년여 동안 투표를 진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던 경영진이 새삼 직무대행에 대한 투표 협의를 재개하자는 것은 결국 언론사가 향해야 할 방향인 편집국장 임면동의제에 대한 논의를 모면해 보자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경영진은 총국장제도라는 제작국장 임면동의제가 “회사 인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닌 주장도 늘어놓았다. 법리를 다투지 않는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이 났을 뿐, 본안 소송은 끝까지 진행된 적이 없다. 당시 소송이 중단됐던 것이 경영진이 끝내 사원들에 대해 저버린 신의 때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인사권 침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경영진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 할 수밖에 없다.



'세월의 변화' (좌) 1989년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고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며 진행된 연합통신 과업 당시 박노황 사장이 '편집국장 직선제로 민주언론 정착하자'는 피켓 뒤에서 머리엔 '투쟁' 띠를 두른 채 행진하고 있다. (우) 2015년 3월 취임 직후 박 사장이 임원들과 함께 국기게양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제공] 두 사진 모두 노란 동그라미 표시가 박 사장.

# 노조원 76% "협상무의미.경영진 퇴진요구해야" 92% '사장 선임방식 개선' 필요성 공감

2015년 3월 취입 직후부터 공정보도 파괴, 불합리한 인사, 사내민주화 퇴보를 자행해온 경영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나 조합원들의 뜻을 더욱 효율적으로 명확하게 수렴하고자 지난달 25~26일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공영언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조합원 549명 중 374명(68.12%)이 참여한 가운데 75.67%(283명)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현 경영진과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비율은 23.26%(87명)였다.

103일간 진행된 공정보도 쟁취 파업의 잇기 힘든 기억, 1년도 남지 않은 경영진 임기를 비롯한 현실적 여건에도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만큼 높게 나온 것은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뜻이 얼마나 강하고 절실한지 명백히 보여준다.

이번 설문 결과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박노황 사장 등 경영진 중간평가에서 나타난 조합원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평가에서 경영진은 공정보도, 콘텐츠경쟁력, 사내민주화, 합리적 인사 항목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고 종합평가는 D등급을 받았다.

또 이번 조사에선 정권에 휘둘리는 연합뉴스 사장 선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인식이 압도적이었다.

사장 선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지 물음에 57.49%(215명)가 ‘매우 그렇다’고, 34.22%(128명)가 ‘그렇다’고 답해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비율이 90%를

넘었다.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다’와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2.14%(8명), 0.53%(2명)에 그쳤다.

현재 이사의 여야 비율이 6대 1 또는 5

대 2로 기울게 되는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사실상 사장이 선임되다 보니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현 경영진이 회사를 ‘비정상적’으로 운

영해 현재의 모습까지 이르게 한 데에는 사장 선임 방식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김태식 조합원 해고는 부당” 법원 판결에도 사측은 ‘모르쇠’

김태식 조합원을 해고한 사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4월 7일 김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회사는 2015년 11월 27일 ▲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인사명령 위반 ▲ 업무 중 사적 SNS 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 부적절한 언행 ▲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을 이유로 김 조합원을 해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조합원 해임 처분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선 SNS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했을 뿐,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회사가 내건 징계 사유를 두고 1심보다도 더욱 구체적으로 부당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조합원이 가족돌봄휴직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가족을 돌봤음을 재차 인정하면서 회사가 법률로 보장된 가족돌봄휴직 사

유를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삼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고 처분 당시에 근태 불량, 외부 강연 등의 징계 사유를 회사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소송 과정에서 이를 새삼스럽게 해고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두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회사가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게 김 조합원을 가혹하게 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도 회사는 항소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소했다.

회사는 또 5월 24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김 조합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나타냈다. 부당해고임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김 조합원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표적해고 됐다’는 본인 주장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복직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도 노사협의회 이후에는 회사가 ‘전향적’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식으로 어불성설을 펼쳤다.

이에 김태식 조합원은 노조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복직은 법원의 결정이지 박노황의 은사품이 아니다”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 1면에 이어

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를 기사로 작성하면 분량이 대폭 줄어들고, 대통령을 언급한 문장이 편집됐다”고 비판했다.

막내 기수들은 회사가 비정상적 길로 가는 게 “편집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고, 편집국장이 없는 탓이고, 제대로 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면서 편집국의 편집권 보장, 사원 동의를 얻은 편집국장 임명, 수습사원 공채 등을 경영진에 요구했다.

분노의 성명 릴레이 바통은 30기가 이어받았다.

30기 기자들은 불공정 보도와 인사 전횡을 바로잡으라며 꾸준히 제기한 요구 사항에 “경영진은 끝내 귀를 닫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박노황 사장이 2년 전 취임식에서 ‘사우들이 행복한 회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애국 저널리즘으로 무장한 기사들이 나가고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사원들을 상대로 지방 발령·승호 및 승진 누락의 칼을 휘두른 것 등을 약속 불이행의 사례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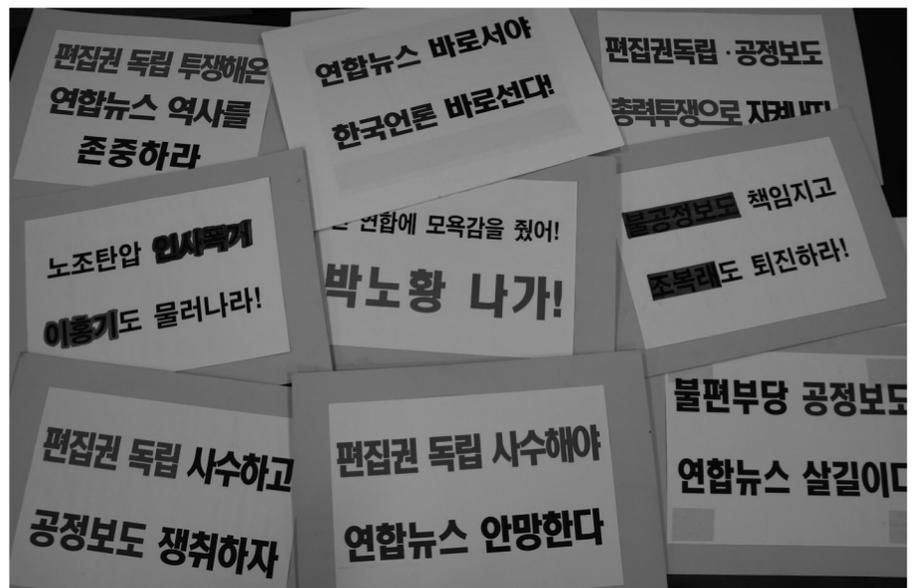
기수 성명에 경영진은 개선의 정이 없었던 노사협의회 결과를 아전인수·침소봉대하는 호소문을 내놓고 노조 흔들기에 나섰다.

간부급 인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평사원 인사’를 갑자기 통보해 회사를 ‘뒤숭숭한’ 분위기로 만드는 꼼수도 부렸다.

31기들은 이에 ‘경영진의 비겁한 처세술을 본다’는 제목의 성명으로 사측의 꼼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경영진은 아직도 무한 시장 경쟁 운운하면서 불안과 위기를 조장하고 노사협의회 결과를 왜곡해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사측을 질타했다.

32기 기자들도 성명 대열에 동참해 “



급한 불만 끄자는 경영진의 졸렬함에 연합뉴스의 위상을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조속히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걱정했다.

이들은 이어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연합뉴스의 위상을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조속히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